

홈플러스 정상화, “제2의 MBK에 맡길 수 없다” 기자회견 기획안

□ 취지

- 홈플러스 회생절차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두 기업은 유통업 경험이 전무한 부동산 투자회사와 차입형 인수 구조의 기업으로, 산업적 비전이나 경영역량이 부족하고 실질적 자본여력도 매우 취약함.
- 두 기업 모두 부동산 가치 상승과 매각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자금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인수자금 상당 부분을 외부 차입에 의존해 회사의 부채를 다시 전가하는 위험한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이러한 기업에 홈플러스의 경영을 맡긴다면, 부동산 매각과 단기 수익 회수에만 몰두했던 ‘MBK식 경영’이 재현되어 제2의 MBK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더불어민주당 ‘홈플러스 TF’와 회생법원이 인가 전 M&A 절차를 서두르지 말고 인수자 공개 모집기간을 연장하여 적격 인수주체를 다시 검증할 것을 촉구하며, 유암코·캠코 등 구조조정 전문기관이 부실채권 정리 과정에 참여해 인수환경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봄.
- 이에 이러한 부실 인수구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홈플러스 회생이 투기자본의 출구전략이 아니라 노동자·협력업체·전단채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 모두의 의견이 반영된 공정한 정상화 절차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 방문개요

- 일시/장소: ‘25. 11. 5.(수) 08:30 / 회생법원 정문 앞
- 참석: 유동수 홈플러스 TF 단장, 민병덕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이정문·김남근·김승원·김현정·이강일
- 진행순서 ※ 사회: 김남근 의원
 - 참석자 소개 및 행사 취지 설명(사회자)
 - 유동수 TF 단장, 민병덕 을지로위원장, 김승원 의원 발언
 - 기자회견문 공동 낭독(이강일, 이정문, 김현정 의원)

※ 기자회견 종료 후 법원행정처로 이동(법원행정처장 면담)

- 일시: 2025년 11월 5일(수) 오전 9:00(서울회생법원 앞 기자회견 직후)
- 장소: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자회견문]

홈플러스는 국내 9위 고용기업으로, 임직원 2만 명과 외주·협력업체 10만 명의 생계가 달려 있으며, 국산 농산물 유통망의 20%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업의 회생절차는 중대한 민생 문제이자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사안입니다. 그러나 최근 회생법원에 제출된 두 건의 인수의향서(LOI)를 살펴보면, 홈플러스의 진정한 회생이 아닌 ‘제2의 MBK 사태’로 되풀이될 위험이 매우 큼니다.

1.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두 회사는 홈플러스 정상화에 대한 의지 없이 부동산 매각 등 먹튀를 노리고 뛰어든 기업입니다.

현재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두 기업의 면면을 살펴보면,

첫 번째 인수주체는 유통업 경험이 전무한 부동산 전문회사로, 산업적 시너지나 점포 운영능력 없이 부동산 가치 상승과 매각 차익만을 노리는 형태의 기업입니다. 이는 MBK가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부동산 매각과 고배당으로 이익을 회수했던 방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인수주체는 실질적으로 또 다른 사모펀드가 차입을 통해 회사를 사들이는 구조, 즉 전형적인 레버리지드 바이아웃(LBO) 방식입니다. 자기자본이 아닌 대출을 기반으로 인수하고, 그 상환 부담을 회사에 전가하는 형태로, 이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회생 이후 또 다른 불안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서는 결코 경영 정상화가 불가능합니다. 두 인수 주체 모두 산업적 비전과 장기적 경영역량이 결여되어 있으며, 실제 재무구조 역시 자본잠식 상태로, 인수 이후에도 리스크가 높은 구조와 고용·입점업체 거래선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투기자본 중심의 자산회수 전략이 반복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이들은 홈플러스의 회생을 이끌 주체가 아니라, 또 다른 MBK가 될 가능성이 큼니다.

2. 법원은 인가 전 M&A를 연기하고 인수자 모집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회생절차의 목적은 투기자본의 출구전략이 아니라 기업의 실질적 회생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줄속으로 매각 절차를 서두른다면, 홈플러스는 제2의 MBK 사태가 되풀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회생법원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법원은 줄속으로 인가하지 말고 인가 전 M&A 인수자 공개모집기간을 연장하십시오. 인수자의 경영역량, 사업비전, 자금조달능력 등을 충분히 검증하라는 요구입니다.

시간을 조금 더 들더라도, 실질적 자본력과 유통산업 경영역량을 갖춘 기업을 인수주체로 선정해야 합니다. 또한, 인수심사 과정에서 노동조합·입점, 협력업체·전단채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공식 의견청취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회생은 법률적, 기계적 절차일 뿐, 사회적 지지와 공감대를 얻을 수 없습니다.

3. 현 인수 구조로 회생이 불가능하다면, 현실적인 대안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두 개의 인수희망서 제출기업의 면면을 살펴보면 현재 홈플러스의 회생이 불투명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만약 공개입찰에서 더 이상 인수자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회생절차 과정에서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연합자산관리회사(유암코)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구조조정 전문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부실채권 규모와 자산 평가에 대한 MBK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기관이 중심이 되어 법원 회생절차 과정에서 부실채권을 투명하게 정리하고 채권조정을 수행해야, 경영능력과 자금력을 갖춘 유통기업들이 컨소시엄 등 다양한 형태로 인수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역시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10만 협력업체와 수만 명의 노동자 고용이 걸린 사안인 만큼, 정부는 구조조정 기관의 역할을 지원하고 채권정리·고용승계·입점업체 보호 등 핵심 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결국 정부와 공적기관, 법원이 협력하는 투명한 회생 절차를 통해서만 홈플러스의 진정한 정상화가 가능합니다.

4. 홈플러스의 진정한 정상화를 위한 3대 조건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홈플러스의 회생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진행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2만 명 노동자의 고용이 온전히 승계되어야 하며, 고용승계 계획이 인수계약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입점해 있는 중소상공인들의 영업승계가 보장되어야 하고, 10만 협력업체의 거래선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회생절차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홈플러스 전단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구제가 이뤄져야 됩니다.

5. MBK의 방관과 책임 회피를 규탄하고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현재 홈플러스는 전기가 끊기고, 납품업체의 물류공급 중단과 노동자 임금이 체불이 우려등으로 기업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주주 MBK파트너스는 아무런 책임 있는 대응을 하지 않은 채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MBK는 인수 이후 10년간 부동산 매각과 고배당으로 수익을 챙겼지만, 기업이 위기에 빠지자 회생절차 뒤에 숨으며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투기자본의 실험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는 수만 명의 노동자, 수십만 명의 생계, 그리고 지역경제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태를 단순한 민간기업 문제가 아닌 국민경제적 민생 위기로 인식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홈플러스의 정상화와 ‘제2의 MBK 사태’ 방지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